

죽음경관의 배제와 포섭 : 근대 한국의 제도적 담론의 개입에 대한 고찰*

서일웅** · 박경환***

Exclusion and Inclusion of Deathscape : An Investigation on the Intervention of Institutional Discourses in Modern Korea*

Seo, Il Woong** · Park, Kyonghwan***

요약 :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제를 고찰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의 인문 지리학 영역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를 고찰하였다. 이 결과 1950년대부터 물질 경관의 외형 변화에 주목하는 죽음의 지리가 1990년대 무덤 경관 이면의 배경과 맥락에 주목하는 죽음경관 연구로 변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근대 이후 한국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담론이 시민사회의 죽음경관의 배제와 포섭에 개입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가가 기존 죽음경관인 묘지를 억제하기 위해 ‘여의도’, ‘불법·호화·무연고묘지’ 담론 같은 배제 의식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 납골, 산골(散骨) 시설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신라’, ‘선진국’, ‘님비’를 핵심으로 하는 여러 담론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의 발현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들이 진실로 수용되고 그 이면의 모순들이 은폐되는 현상들을 포착하였다.

주요어 : 죽음의 지리, 죽음경관, 근대 국가, 담론, 제도, 진실효과

Abstract :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two-folds. First, it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previous geographic studies have approached to human death and its spatial representations through various theoretical frames. It is found that necrogeographies on cemetery have changed into those studies focusing on the social and spatial contexts in which deathscapes are represented. Second, this research analyzes what institutional discourses have intervened in excluding or including modern deathscapes in Korea. Some discourses socio-spatially excluded specific (undesirable) deathscape, and they mostly depended on employing such terms as ‘Yeoido’ and ‘illegal, luxury, or deserted cemeteries’. On the contrary, other discourses employed such terms as ‘developed country’, ‘Unified-Silla Dynasty’, and ‘NIMBY’, and they introduced new (desirable) types of deathscapes such as cremation. This paper conclusively argues that these discourses engendered ‘truth effect’ so as to introduce and promote specific deathscapes while repressing pre-modern (or conventional) deathscapes and concealing discursive contradictions.

Key Words : necrogeography, deathscape, modern state, discourse, institution, truth effect

1. 서론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김수정 역, 2012, 11).

근대 사회에서 죽음은 삶의 유한함을 반향 하는 ‘끝’으로, 또는 이성의 도달범위를 벗어난 성역 등

으로 다양하게 재현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현들은 ‘인간의 숙명으로서의 죽음’이나, ‘숙명 앞에 선 인간의 평등’ 같은 또 다른 화두들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재현이 지니는 문제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곧, 죽음이라는 현상의 근본적 의미에 천착하기보다, 반대로 그와 같은 논의가 촉발되는 배경이나 이면의 권력 관계 등에 더욱

* 본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11)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석사(M.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ameosake@naver.com)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및 샌디에이고주립대학 지리학과 방문겸임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Visiti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 Diego State University)(kpark3@gmail.com)

주목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홍성민 역, 1993; 임인숙 역, 2000; 천선영, 2012).

이와 같은 시도들에서는 대개 죽음이라는 접근 대상을 사회적 구성물로서 바라본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상의 의미를 선언하기보다, 죽음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역으로 추적하는 데에 주안을 둔다. 곧, 근대 사회에서 회자되는 죽음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죽음 담론의 구조나 생산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자칫 또 다른 담론을 생산하는 데에 머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죽음이라는 총체적 현상 자체보다,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한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천선영, 2012).

국외 지리학과 사회과학에서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반세기 이상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지리학에서는 지리적 분석 개념인 경관을 활용하여, 물질 경관 또는 그 이면의 권력관계를 고찰하는 방법론을 축적해 왔다. 이 연구들은 ‘죽음의 지리(necrogeography)’와 ‘죽음경관(deathscapes)’ 연구로 구분된다. 주로 1990년대 이전의 연구인 죽음의 지리는 죽음과 관련된 물질적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관의 형태와 공간적 속성에 주목해왔다. 1990년대 무렵 발달한 죽음경관 연구는, 지명, 회화, 사진, 도시계획 등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물질 경관 이면에 존재하는 관념, 문화, 젠더, 국가 권력 등을 탐색해왔다(Kong, 1999).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고찰한 뒤, 이들이 국내 죽음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실제 적용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국외 지리학에서 축적되어 온 죽음의 지리 및 죽음경관 연구 성과들을 고찰하고, 국내 연구 성과들에 비추어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이론적 고찰들을 통해 도출된 함의를 한국 사회에 실제 적용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지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죽음의 지리 및 죽음경관 연구가 지니는 특징과 함의를 탐색한다. 둘째, 그와 같은 논

의들을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특징과 함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죽음의 지리 및 죽음경관 연구

영미권 내 죽음경관 연구 동향을 정리한 Kong (1999)은 죽음경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죽음의 지리 및 죽음경관 연구로 소개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195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죽음의 지리 연구 흐름이, 1990년대 문화적 전환 무렵의 죽음경관 연구로 통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질적 실체를 기반으로 연구되어 오던 전통 지리학 내에서의 죽음의 지리가, 물질 이면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적 전환 이후의 죽음경관 연구로 자연스럽게 그 외연을 넓혀 온 것이다(Kniffen, 1967; Francaviglia, 1971; Kong, 1999).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와 같은 국외 지리학에서의 죽음 연구 동향을 죽음의 지리 및 죽음경관 연구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국내 연구에 비추어 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1) 죽음의 지리

국외 지리학에서의 죽음 연구는 1950년대 초반 죽음의 지리(necrogeography) 연구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봉분, 묘비 등의 형태와 변화에 대한 접근에서, 분포, 입지와 같은 공간적인 접근으로 점차 발전해온 흐름을 보인다. 이 중, 죽음경관의 물질적 형태에 주목하는 초기의 접근은, 주로 설문, 답사 등을 통해 봉분, 묘비 같은 물질 경관과 문화, 경제 지표 간 관련성을 탐구하였다(Kephart, 1950; Young, 1960; Price, 1966). 또, 공간적 속성에 주목하는 접근에서는, 도시 스케일에서의 개별 무덤, 집단묘지에 관심을 두며 규모, 분포, 입지, 이동 등을 주로 탐구하였다(Pattison, 1955; Darden, 1972). 그리고 대개 이와 같은 연구 경향들은 엄격히 구분되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이후의 연구들로 이어져 왔다(Francaviglia, 1971).

각각의 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죽음의 지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문

표 1. 죽음의 지리: 죽음경관의 물질적 형태, 입지, 공간 활용 등을 연구

연구 경향	주요 연구
죽음경관의 물질적 형태에 관한 연구: 설문, 답사 등을 통해 봉분, 묘비 같은 물질 경관과 문화, 경제 지표 간 관련성을 연구	Kephart(1950); Young(1960); Price(1966)
죽음경관의 공간적 속성에 대한 연구: 도시 스케일에서 개별 무덤 또는 집단묘지의 규모, 분포, 입지, 이동 등을 연구	Pattison(1955); Darden(1972)
물질적 형태와 공간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 집단묘지의 입지, 배열, 집단묘지 내 개별 무덤의 형태 변화를 동시에 고찰	Francoaviglia(1971)

현은 Kniffen(1967)의 『미국 내에서의 죽음의 지리』(Necrogeography in the United States)라는 짧은 저술이다. 이 저술은 최초의 죽음의 지리 연구로 Kephart(1950)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Kephart(1950)는 필라델피아의 시민들을 상대로, 장례 절차, 장례식장, 무덤의 크기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죽음경관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죽음경관과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ephart는 크리스천 장례의식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기인하였다는 역사적인 측면과, 미국의 장례 문화가 산업화, 전문화, 공공화라는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밝혀냈다. 또, 이 연구는 사후 경관의 호화스러움과 같은 의제가 역사적으로 늘 계급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격차에 따라 서로 다른 사후 경관이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결국 입증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포착하고자 하는 사후 문화 경관이 한 시대를 기점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으며, 연구에서 설정한 계급이라는 분석 범주가 자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Kephart(1950)의 연구는 결국, 사후 경관과 사회적 계층 사이의 개연성만을 드러내는 결과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죽음 경관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죽음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 Kephart(1950)는 (형태, 크기, 규모라는 경관 속성에서 사회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입지적 특성이 죽음경관에서 더욱 중요한 속성일지 모른다는 제언을 남겼다. 이는 이후 등장하는 입지 중심의 죽음 연구 방식의 초석이 되었다(Kephart, 1950).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Young(1960) 역시

죽음경관이 공공 목적의 산물이며 정량화 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제도 연구의 유용한 사례라 강조하였다. Young은 캐나다 북동부에 위치한 두 마을의 묘비를 비교하여, 경제소득지표와 사후경관의 형태가 유사한 증감을 보여 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묘비에 기록된 사망자의 이름들을 분석하여,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경제 부흥기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마을 구성원이 많이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혈통 중심주의가 경제 변동과 유사한 증감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사망자의 이름이 가족주의를 대표하는 지표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지만, 죽음경관과 사회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죽음의 지리 연구 대상을 무덤 너머의 통계와 언어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지리 연구에 풍성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Young, 1960).

Price(1966) 역시 죽음경관이 문화적 결과이자 공간 사용 현상으로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죽음경관 연구의 잠재적 가치와 체계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규모를 기준으로 4개 유형의 묘지를 산정한 뒤, 묘지의 규모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확대되어 왔음을 밝혀냈다. Price는 경관에 나타나는 문화의 지역적 특색, 민족성의 변화, 공간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 무덤을 통한 소수자 이해 등 죽음경관에 나타나는 기호의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잠재성을 강조하였다(Price, 1966).

Pattison(1955)은 도시의 토지 사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죽음경관에 가해지는 지자체의 통제와 대중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특히, 그는 1830년대 도시 팽창 시기에

발표된 시카고 도시현장과, 전염병을 이유로 시내에 묘지 설립을 금지한 법률, 교외로 매장을 유도한 법률 등이 죽음경관의 입지와 인식에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1850년대에 있었던 묘지의 교외 이전과, 188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새롭게 등장한 묘지들을 언급하면서, 이 시기부터 묘지의 다양화와 대형화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죽음경관을 토지이용 및 입지와 관련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점과,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묘지의 대형화, 상업화 등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Pattison, 1955).

Darden(1972) 역시 1850년과 1900년 사이의 퍼즈버그의 묘지들을 종교묘지, 시립묘지, 개인묘지 등으로 구분하고, 각 묘지들이 점차 교외로 이전(移轉)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인터뷰, 고지도,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1850년과 1900년의 묘지 현황을 지도와 표로 완성하였다. 그 결과 1850년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있던 무덤들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1900년대에 교외화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종교별, 집단별, 개인별로 다양한 입지 요인이 존재함을 밝혀냈다(Darden, 1972).

Francaviglia(1971)는 1970년대 이전 죽음의 지리 연구 경향을 봉분, 묘비 등의 형태에 관한 연구와 토지 이용 패턴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이 두 경향을 통합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형태적 연구가 주로 역사학, 민속학, 고고학적 연구와 유사하고, 토지 이용 패턴에 대한 연구가 지리학적 연구 방식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면서, 양자를 통합한 종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Francaviglia, 1971).

실제 Francaviglia(1971)는 죽음경관이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만들어진 경관이자 높은 조직화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경관이라는 전제 하에서) 건축학적, 공간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미국 오리건 주의 묘지를 대상으로 9유형의 조형물들을 구분하였으며, 이와 같은 유형들이 각각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유행을 거쳐 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의 묘지의 입지가 언덕 상층부에서 언덕 아래로, 시내에서 교외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여 왔음을 밝혀냈으며, 묘지 내 무덤의 배치 특성이 자유롭고 불규칙한 구조에서 수직적·위계적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1960년대 말 기획되어 탄생한 일부 묘지에서 이와 같은 수직적 구조가 다시금 교란되는 현상이 목격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작은 샘플들에 대한 연구로서 일반화시키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사회·문화적 현상이 맺히는 상으로서의 죽음경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 죽음경관의 건축학적 형태 및 공간적 형태를 동시에 강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를 유형화하고 시계열화 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Francaviglia, 1971).¹⁾

한편, 이와 같은 죽음의 지리 연구는 점차 물질적 경관과 관련된 사회적 속성들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으나, 1990년대 무렵 나타난 문화적 전환 이후의 죽음경관 연구들과 비교할 때 권력, 담론, 재현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 죽음경관 연구

Kong(1999)에 따르면 1990년대 국외 지리학에서는 죽음경관(deathscapes)의 물질적 속성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와 이를 경관에 표상하게 하는 권력, 담론, 재현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죽음과 죽음경관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구성물로 보고 그 이면의 맥락과 실천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경관을 문화의 최종 결과물로 보는 초유기체적(super-organic) 접근 대신, 경관 이면의 인간 활동, 지리적·역사적 맥락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찰하려는 신문문화지리 이후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Kong, 1999).

본 절에서는 Kong(1999)에 의해 소개된 대표적 연구들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분류할 때 같은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1990년대 전후의 죽음경관 연구들을 소개한다. 이 연구들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죽음경관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의식에 대한 연구(Zelinsky, 1976, 1990, 1994; Knight, 1985), (2) 죽음경관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Stanley, 1974; Howett, 1977), (3) 죽음경관과 관련된 젠더에 대한 연구(Moriss, 1997;

표 2. 죽음경관 연구: 죽음경관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연구 경향	주요 연구
죽음경관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의식에 대한 연구	Zelinsky(1976, 1990, 1994); Knight(1985)
죽음경관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연구	Stanley(1974); Howett(1977)
죽음경관과 관련된 젠더에 대한 연구	Moriss(1997); Hartig and Dunn(1998)
죽음경관에 대한 근대 국가 및 식민 지배 권력의 제도적 개입에 과정 대한 연구	Yeoh(1991); Christopher(1995); Yeoh and Tan(1995)

Hartig and Dunn, 1998), (4) 죽음경관에 대한 근대 국가 및 식민 지배 권력의 제도적 개입에 과정 대한 연구(Yeoh, 1991; Christopher, 1995; Yeoh and Tan, 1995)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Kong(1999)에 의해 소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Kong(1999)은 1990년대 이후 죽음경관 연구에서 새로운 경향이 부상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경향들이 영국,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고 소개하였다. Kong(1999)은 이 연구들이 대개 (1) 신성함과 세속적인 것이 경합하는 곳으로서의 죽음경관 연구, (2) 죽음경관 안에 포함된 젠더, 계급, 인종 등을 다루는 연구 (3) 죽음경관 속에 담긴 국가주의나 목가(牧歌)주의에 관한 연구, (4) 이와 같은 의제들이 재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죽음경관 연구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그 같은 최근의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로서 Moriss(1997)와 Hartig and Dunn(1998)의 연구 등을 소개하였다(Kong, 1999).

Moriss(1997)는 경관의 상징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원 묘지(garden cemetery)로 꾸며진 영국의 1차 세계대전 추모 시설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경관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젠더화된 경관이 전쟁, 공포, 국가와 같은 의제를 가정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라 분석하였다. 또, 당시 수천 명에 가까운 여성 사망자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묘지가 주로 남성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덧붙여, 추모 시설 건설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주변적이었던 점도 지적하였다. Moriss(1997)는 남성 원예학자, 디자이너, 정원사들이 만들어 낸 꽃밭 같은 정원묘지의 경관을 비판하며, 이 죽음경관이 남성성, 동

료애, 군사적인 것과 같은 전쟁의 느낌을 유지시키면서도 동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경관을 여성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Moriss, 1997; Kong, 1999).

Speck(1996) 역시 여성이 전쟁 추모관에 추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커뮤니티의 희생을 상징하기 위해 여성이 늘 어머니 겸 간호사의 형상과 같이 금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스럽고 수동적이고 양육적인 모습으로 재현된 이 여성성은 여성을 아내나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인 시민으로 주변화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Moriss, 1997; Kong, 1999).

Hartig and Dunn(1998) 역시 호주 뉴캐슬의 고속도로 인근에 설치된 교통사고 사망자 추모물을 조사하여 이 추모물들이 도시의 남성성 해체모니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젊은 남성들은 늘 ‘위험스럽고’, ‘속도를 즐기고’, ‘빠른 차를 모는’ 자기중심적인 형상으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추모물들은 이와 같은 남성성을 은연중에 재생산하고 추모하며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장소에 부재(absence)하는 것들을 통해 오히려 장소의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물질적 경관을 구성하는 이면의 실천과 맥락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Hartig and Dunn, 1998; Kong, 1999).

Kong(1999)이 소개한 위 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분류할 때 죽음경관 연구에 포함되는 사례들은 매우 풍성하다. 일례로 Stanley(1974)는 미국 정원묘지 발달사 속에서, 문화적 제도 변화로서의 묘지의 위상을 연구하며, 새로운 유형의 무덤이 제도화 되는 과정을 밝혀냈다. 그는 묘지에

대한 인식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철학, 교육 등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변모해 간 미국의 묘지경관과 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 과정을 조명하였다(Stanley, 1974). Howett(1977) 역시 묘지 내 경관의 정원화나 예술화에 내재된 고정관념들을 조명하면서, 묘지라는 공간의 다중적 사용을 위해 이러한 선입견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owett, 1977).

Knight(1985)는 역으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 들어있는 죽음경관을 탐구하여, 죽음의 공간이라는 지리적 상상과 현실 세계의 일상 경관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묘지의 명칭, 묘비에 새겨진 글귀, 천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등을 분석하며, 천국이라는 공간이 실제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 있음을 밝혀냈다(Knight, 1985).

Christopher(1995)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포트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삶의 공간에서의 인종 분리만큼 죽음 공간에서의 인종 분리가 극심함을 입증하였다. 공간을 통치 근간으로 삼는 근대 국가가 죽음경관 안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밝힌 것이다(Christopher, 1995). Yeoh(1991, 1996) 및 Yeoh and Tan(1995) 역시 식민 지배 시대 싱가포르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의 매장문화가 건강 및 도시 개발 담론과 충돌하여 교외화 되거나 화장 문화로 변모한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권력과 충돌한 중국인 이주자들의 죽음경관이 매장에서 화장 경관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조상 숭배를 바라는 중국인 이주자들의 신성 공간과, 위생 및 개발 담론을 앞세우는 세속적 국가 권력사이의 경합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하였다(Yeoh, 1991, 1996; Yeoh and Tan, 1995).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국외 지리학에서의 죽음 연구는 물질적 경관의 형태와 공간적 속성에 주목하는 초기 죽음의 지리에서, 경관 이면의 권력 관계 재현, 담론 등에 주목하는 죽음경관 연구로 일정한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국외 지리학과 달리, 그동안 국내 지리학에서

진행되어 온 죽음 및 죽음경관 연구는 주로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최창조, 1978; 최창조·박영한, 1978; 윤홍기, 1987; 옥한석, 2003).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개 음택풍수적 관점에서 죽음경관의 형태와 입지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지리학에서는 죽음경관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풍수지리라는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 외의 연구 대상과 방법들이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최근에 풍수지리를 하나의 지식체계로 논의하여 풍수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권선정, 2003, 2011), 이 역시도(풍수지리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풍수지리라는 소재를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는 특징을 갖고 있다.

풍수지리 이외의 시각에서 죽음경관을 논의한 연구는 그 사례가 양적으로 매우 미약한데, 여기에는 묘지의 형태와 크기, 묘비 등에 대해 형태적 접근 방식을 취한 김태호(1990)의 연구와, 세계장묘 문화를 국내 장묘 문화와 간략히 비교한 다음 문제점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전국 묘지 현황을 추적한 김부식(1984)의 연구가 있다. 김태호(1990)는 충북 괴산군 증평읍에 위치한 분묘들을 현장 답사하여 묘지의 크기와 고도, 방위, 연대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조사된 결과에 통계적 유의미 값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석틀 역시 풍수지리 사상에서 가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와 해석 사이의 관련성이 낮고 그 함의가 근대 죽음경관 해석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부식(1984)의 연구는 국내 묘지 현황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연구였으나, 통계 분석 이전에 이미 묘지의 수량이 많은 것을 문제시하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던 관계로, 죽음경관을 문제시하는 정책적 담론과 유사한 시각을 가졌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밖에 풍수지리 이외의 관점에서 죽음경관을 논의한 연구로 장소자산(류주현, 2008), 투어리즘(최영환·이혁진, 2010), 항공 사진을 통한 묘지 현황 파악(한희 등, 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차철욱 등(2010)의 연구 역시, 과거 공동묘지였던 지역을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실천을 그려냈으나, 그 스케일 면에서 연구 지역을 넘

어서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외 지리학에서의 연구 동향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풍수지리 이외의 주제와 소재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정책적 담론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접근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국외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에서는 근대 죽음경관에 대한 접근이 양적으로 미약하였으므로, 국외 죽음경관 연구가 빈도 높게 주목해 왔던 묘지, 화장장, 납골당, 추모시설과 같은 장사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장, 화장, 납골, 산골과 같은 장사 시설을 중심으로,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죽음경관들이 겪어 온 일련의 변화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바라보고 분석하기 위해, 해방 후 죽음경관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가의 제도적 개입 과정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근대 국가가 영토와 시민을 근간으로, 물질적인 경관의 재편, 근대적 생활양식에 대한 계몽 등을 통해 묘지와 같은 전근대적 실천 양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찰에서는 법률이나 정책과 같은 제도화된 권력 뿐 아니라, 통치 기구 및 정부 조직 등의 실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천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연계시키는, 곧, 국가의 개입 의지를 시민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시키고 자연화 시키는 다양한 전략과 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해방 후 죽음경관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가의 제도적 개입 과정을 고찰하면서,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이라는 질적 접근 방식을 활용 하고자 한다. 여기서 담론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언술들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칙과 구조 또는 내·외부적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된 권력을 의미한다(Mills, 2004). 때문에 담론 분석은 담론의 생산과 순환 과정에 존재하는 ‘설득’과 같은 ‘자연화’ 효과에 대해 주목하면서, 아카이브(archive) 내에서 특정한 효과를 생산시키고 확산시키는 숨겨진 법칙 체계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을 중시한다(박경환

2006; 임경규 역, 2012). 곧, 담론 분석은 특정한 담론이 진실로서 받아들여지는 효과와 은폐되는 모순에 대한 고찰에 주목하는 방법인 것이다(Rose, 2007; Hay, 2010).

이에 본 논문에서도 죽음경관에 대한 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다만, 질적 연구에 있어 자료의 절대적인 양이 분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죽음경관과 관련된 담론의 지형을 드러내 주는 텍스트들을 찾아, 그와 관련성이 높은 텍스트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선정한다(Hay, 2010).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아카이브에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와 같은 정부 기관과 산하 연구기관 등의 내부문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또, 해당 기관의 주요 인물에 관련된 저술이 포함되며,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회의록, 정부 외부의 학술단체와 시민단체의 발간물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장사 정책 등과 관련된 신문 기사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리리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등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이외에도 연관된 기사들을 폭넓게 활용하였다.²⁾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죽음경관의 변화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근대 국가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죽음경관에 대한 배제와 포섭 과정에 동원된 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와 같은 담론들을 개입 대상인 기존의 죽음경관을 배제하는 담론, 도입 대상인 새로운 죽음경관을 포섭하는 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 죽음경관을 둘러싼 배제의 담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 과정에서는 크게 기존의 죽음경관을 배제하는 담론과 새로운 죽음경관을 포섭하는 담론이 동원되어 왔다. 배제 담론으로는 (1) 전통적 죽음경관인 개인묘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여의도’담론과 (2) 촉발된 문제의식을 실제 사실 묘지 억제로 이어나가는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이 동원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 두 담론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여의도담론

죽음경관을 둘러싼 배제 담론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제 담론에서는 죽음경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생산하는 묘지에 대한 재현이 근간을 이루어 왔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60년대 말부터 2014년 현재까지 통계적 지식의 생산과 확산 과정에서 활용되어 온 여의도담론이다.

전국 묘지가 서울보다 넓다. 보사부 개선안 마련의 배경. 매년 여의도 넓이만큼 늘어나. 명당 선호로 농경지까지 잠식. 외국선 거의 화장 ... 묘역도 좁아. 100평 이상 호화묘소도 43기나 (경향신문, 1984.9.11, 헤드라인).

여의도담론이란 죽음경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산하기 위해, 제도적 개입의 대상인 무덤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극적으로 재현하는 담론이다. 위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의도담론의 발현 과정은 개입 대상인 묘지의 수량을 조사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조사 결과의 부정확성과, 조사 이전에 설정된 정책 의지가 비가시화 됨으로써 자연화 된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1968년 실시된 전국 묘지 실태조사와 그 조사 결과의 확산 과정이다. 1968년 보건사회부는(이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훈련부를 통해 전국 192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사 관행 및 묘지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해방 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묘지 실태 조사였고, 1960년대 말 시작된 정부의 장사 정책 발현 과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되었다(박남영·김영석, 1970; 김국도, 1970). 당시, 이 조사는 전국 묘지의 숫자를 7만여 정보로 추계하였고, 이 추계는 학술 연구, 정책 자료, 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묘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여의도담론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생산된 추계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1968년 실태조사 이후 정부가 집계하고 있던 묘지 현황 통계에서 드러난다. 이를테면, 1973년의 보건사회통계연보는 전국의 분묘 수를 1,400만기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의 실제 각 항, 곧 각 시도 분묘수를 실제로 더해보면 그 합은 1,398만기로서, 하나의 표 내에서 총계 값이 실제 각 값의 합보다 2만기 많게 오기 되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1973). 1974년의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역시 전년의 묘지 수를 1,400만기로 여전히 잘못 기록하는 동시에, 1974년의 전국 묘지 총 수를 9,788,787기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묘지의 약 35%가 1년 사이에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정에 의거한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 사이에 약 400만기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볼 때, 이 통계가 당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적인 방식으로 집계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통계표의 하단에는 감소한 분묘의 숫자를 ‘공업단지 또는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74). 이와 같은 정황들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묘지 현황 자료가, 매우 불안정한 절차를 통해 생산되고 유포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의 신뢰도 문제는 정부가 실시한 이후의 묘지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들에서도 꾸준히 발견된다.³⁾

두 번째 문제는, 조사 결과의 확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식 생산 과정의 문제가 무시되거나 은폐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책 연구들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학술 지식의 생산 과정이나 미디어 보도 과정에서도 꾸준히 발견되는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생산된 통계 지식이 정부라는 생산 주체의 영역을 넘어, 일반화된 지식, 통용되는 진리로 무한정 재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8년 보건복지부의 묘지실태조사는 전국의 묘지를 7만여 정보로 집계하면서, 이 중 절반가량이 경작 가능한 땅이라고 소개하였다(박남영·김영석, 1970). 그리고 이 발표는 곧바로 장묘 제도의 개선을 연구하는 학계의 기초 자료와

미디어 보도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보도들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를 진실로서 받아들이며, 묘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수용하고 확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69년 9월 18일 매일경제 기사는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기사는 전국 묘지의 총 면적을 7만여 정보로 소개하는데, 이는 묘역과 묘지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1968년 조사 결과가 전국 7만여 정보의 묘역 중 절반가량이 미사용 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이 보도는 전국에 7만여 정보의 묘역이 모두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도는 정부의 묘지실태조사 결과가 한국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죽음경관에 대한 문제의식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준다(매일경제, 1969.9.18).

세 번째 문제는 조사 이전에 이미 설정 되어 있었던 정부의 개입 의지가 은폐된 데에 따른 것이다. 곧, 당시 정부가 실시하고 발표했던 조사가 사실에 대한 과학적 조사라기보다, 정책적 목표에 맞게 죽음경관을 재현한 것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간과된 것이다.

장의 경비는 [...] 시체 1구당 8만원으로서 연 30만 명의 장례비는 240억이나 되며 5년이면 1,200억 원으로서 고속도로 1km당 1억 원씩 든다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고도 남는 경비다(박남영·김영석, 1970, 23).

위 인용문은 1960년대 말 정부가 실시한 전국 묘지 실태 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 위 인용문의 비약적인 비유 외에도, 이미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 자체를 활용하거나, 수집된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던 정황을 보고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전의 개입 목표 은폐는 이후의 실태조사 등에서도 꾸준히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논의들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변화 대상인 묘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생산한 통계적 지식은 정책적 목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비유들을 통해 보다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얼마나 많은 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수치가 믿을 만한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보다 더 큰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수량 중심의 담론이 강해짐에 따라, ‘실존하는 묘지의 양 자체가 정말로 문제인가’ 그리고 ‘만약 문제적이라면 얼마나 문제적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묘지에 대한 양적 재현이 촉발되던 1970년대 초반 발표된 이관석(1973)의 연구는 이 같은 담론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저술을 소개하면서, 중소도시에 적합한 묘지 비율을 토지의 약 1%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묘지제도를 본받아야 할 것으로 묘사하던 정부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당시 정부가 추계한 한국의 묘지가 7만여 정보이든 그 절반가량이든, 이미 한국의 도시들은 바람직한 묘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이관석, 1973).

2)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

여의도담론을 통해 촉발된 문제의식은 불법·호화·무연고묘지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져왔다. 이는 죽음경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묘지 중 계몽의 대상이 되기 쉬운 특정한 경관을 집중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은 무덤에 대한 선호의식을 도덕적으로 재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무덤에 대한 선호 의식은 풍수지리나 특권의식과 같은 전근대적 구습으로 재현된다. 이와 같은 담론은 근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죽음경관 혹은 이를 구현하는 인물들을 모델로서 제시하면서, 해당 기준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은폐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 불법, 호화, 무연고라는 판단의 준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은폐하므로, 결국, 특정한 죽음경관보다 무덤이라는 죽음경관 전반에 대한 혐오와 소외 의식을 촉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차웅 논설위원 : 호화분묘는 오래 전부터 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으나 여전히다. [...]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복을 받고 출세를 하게 된다는 음택 풍수의 발복설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한심한 일이다. [...] 그룹 회장처럼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동아일보, 1998.9.16).

위 인용문은 무덤에 대한 선호의식을 풍수, 특권의식 등의 전근대적 사상으로 폄하하며, 이와 같은 정신에 반하는 실천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실제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그룹 회장(이하 고(古) ○○그룹회장)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한국 사회에 급속히 확산된 화장 장려 운동에 적극 활용된 계몽의 표본이었다는 점이다.⁴⁾

화장 장려 운동 당시, 고(古) ○○그룹회장은 풍수와 같은 전근대적 사상을 떨쳐버리고 화장을 택한 것, 이를 통해 자연보호를 실천한 것, 경제적 부에도 불구하고 사후 평등을 실천에 옮긴 것 등이 집중적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현에는 해당 인물과 관련된 특정 사실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반대로 특정 사실을 비가시화 되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비가시화(非可視化)된 사실은, 고(古) ○○그룹회장이 생전 풍수지리 애호가로서, 사원

들에게 풍수 강연을 실시하거나 사옥 및 그룹 연수원 건물 등에 풍수적 비보를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이 인물이 본사 사옥 완공 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설치한 풍수 비보물이다. 당시 이 인물은 “거북이 빌딩을 등으로 떠받쳐야 사업이 오래도록 번창할 것이니 대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고제희, 2009, 158). 그러나 해당 인물이 풍수지리 애호가라는 사실은 화장 장려 캠페인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두 번째 비가시화 된 사실은, 이 인물이 화장되기 전 안치되어 있었던 가묘의 모습이다. <그림 2>의 무덤과 선영은 이 인물이 자연보호를 위해 화장을 선택하였다는 당시의 계몽 문구들과 상당한 거리감을 보여준다.



그림 2. 고(古) ○○그룹회장의 무덤(좌)과 선영(김두규, 2008, 202)



그림 1. ○○그룹 본사 사옥에 설치된 거북상(한겨레, 2011.5.17)

세 번째 비가시화 된 사실은 이 인물이 엄연한 기업인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 인물이 화장을 통해 구현한 자연보호의 정신은 ○○그룹 계열사가 펼쳐온 조림사업 등과 함께 부각되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이 계열사는 탄소배출권 사업 등의 에코 산업에서 국내 선두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데일리안, 2012.11.5). 곧, 고(古) ○○그룹회장이 생전에 펼쳤던 조림 사업에서 ‘사업’의 의미는 축소되고 ‘조림’의 의미만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화장 캠페인 당시와 이후의 미디어 보도, 정책 연구 자료들은 이 ○○그룹이라는 이름이 친환경의 이미지로 재현되면서 얻는 기업 이미지 제고 같은 경제적 가치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은 묘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묘지를 양산하는 풍수지리, 특권의식 등의 사고방식을 도덕적으로 재현하였다. 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



그림 3. 2000년대 화장 캠페인을 촉발시킨 전 서울시장의 선소(주간한국, 2007.1.5)

리적 사고, 자연보호, 숭선수범과 같은 도덕적 실천 사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덕적 재현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맥락들은 제거되고, 오직 계몽과 홍보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사실들만이 선택적으로 재현되고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계몽 과정상에서의 모순에 덧붙여, 한국 사회에 불법, 호화, 무연고묘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은폐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후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건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이, 실제로는 무덤에 대한 전반적인 소외와 죽음경관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은폐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은 1990년대 말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인 화장 장려 운동을 견인했던 전 서울시장의 선소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묘지는 300평가량의 면적으로 알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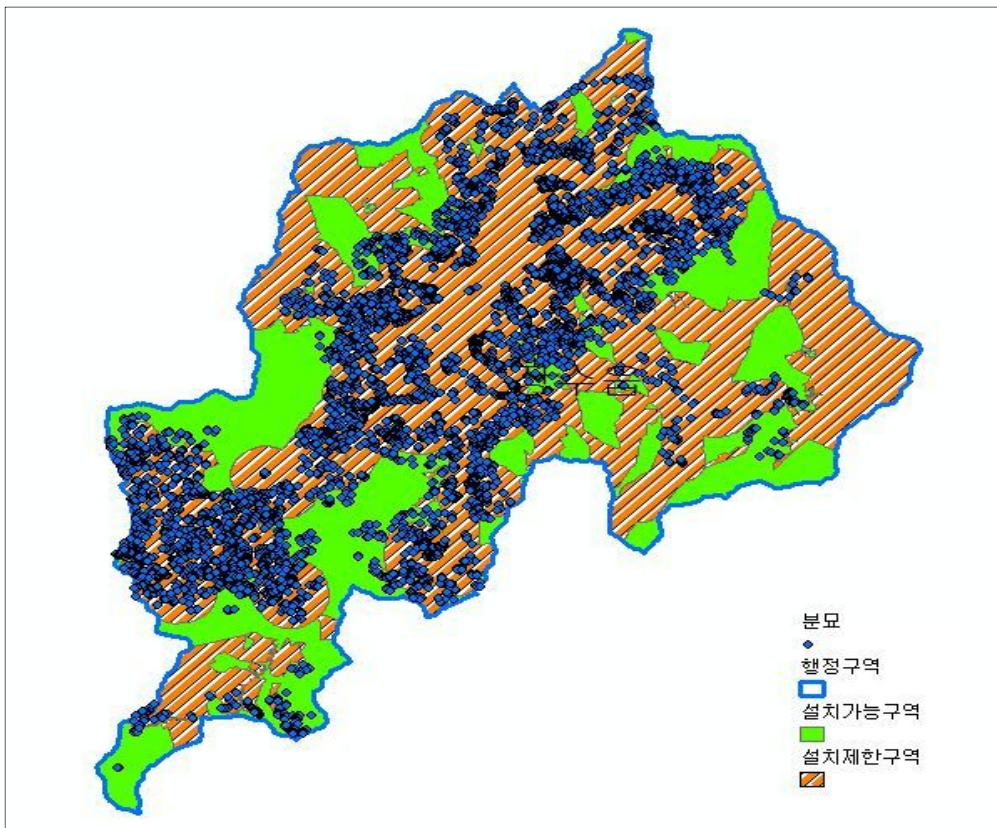


그림 4. 2010년 장수군 장수읍의 불법묘지 현황(전석, 2011, 56)

는데(주간동아, 2005.11.22), 이는 고인의 타계 당시 장사법이 규정하던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허용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곧, 이 묘지는 불법묘지이거나 호화묘지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묘역은 불법묘지로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묘지가 2000년의 장사법 개정 전에 허가된 가족묘지라면 불법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은 2010년 정부가 전국 묘지실태조사에 앞서 실시한 시범묘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림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조사에서 정부는 묘지의 설치시점이 아닌 조사 당시의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불법묘지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그림에 점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묘지가 불법묘지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묘지들에 불법묘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묘지에 대한 억제를 정당화해 온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이 국가의 개입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담론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4. 죽음경관을 둘러싼 포섭의 담론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 과정은 매장 억제 및 화장 장려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는 변화의 대상인 기존 죽음경관에 대한 배제 외에도,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새로운 죽음경관에 대한 포섭 담론이 동원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 중 (1) 개인묘지 대신 공원묘지를, 공원묘지 대신 납골, 산골 시설을 정착시키려는 ‘통일신라’담론 및 ‘선진국’담론, (2) 실제 장사 시설 설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반대 운동을 비판하는 데에 동원된 ‘님비’담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통일신라담론 및 선진국담론

통일신라담론은 전통적 관습으로서 매장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장묘 제도가 매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담론이다. 선진국담론은 한국의 죽음경관이

매우 전근대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특정 국가의 사례를 부각시키는 담론이다. 이 담론들은 한국 죽음경관의 과거와 미래를 의도적으로 재현하여 정책적 목표인 새로운 죽음경관을 정착시키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조장(鳥葬) 풍장(風葬)을 하기도 하지만 화장(火葬)은 토장(土葬)과 함께 가장 오래된 장례방식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문무왕이 ‘서역의 방식대로 불로 태워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길 만큼 화장의 역사는 오래됐다(동아일보, 1998.8.31).

먼저, 이 중 통일신라담론은 화장이라는 장법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화장 장려 운동이 가속화된 1990년대 말 이후 부각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개 한국의 전통적 장법이 매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통일신라 시기 등의 과거 역사 속에서 화장이라는 장법의 전통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진술들의 문제는 한국의 전통적 장법이 매장인가 화장인가와 같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대개, 과거 화장이 실천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그것이 매장 풍습이 뿌리내린 조선시대보다 더 앞선 시기였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담론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화장보다 매장이 더 보편적 장법이었다거나, 매장이 더욱 검소하고 저렴한 장례 방식이었다는 사실들은 축소된다. 또, 매장 풍습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풍수지리사상이 실제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는 점 역시 부각되지 않는다.

한편, 선진국담론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된 1960년대 말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담론이다. 이 담론은 국내 죽음경관을 문제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국외 죽음경관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 목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외 죽음경관에 대한 묘사 역시 달라진다는 부조리를 보인다.

일례로 1970년대 보건복지부의 장사 정책 개발

에 참여하였던 김국도(1970)의 저술에서는 국외 죽음경관을 대부분 공원묘지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직원으로서 1968년의 장사법 개정과 1970년대의 묘지제도개선 장단기계획 등에 적극 참여했던 이 인물의 저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의 장사 제도를 모두 공원묘지로 묘사하며, 각국의 공원묘지들을 1개소 이상씩 소개하고 있다(김국도, 1970).

문제는 이와 같은 국외 죽음경관 소개가 화장 장려 운동이 본격화된 2000년대 무렵의 정부 발간자료들에 비해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2000년의 장사법 개정으로 시한부 매장제도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1999년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는 이와 같은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필도·고덕기, 1999).

이 보고서는 시한부 매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실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개되는 4개의 국가 중 단 2곳만이 시한부 매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소개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제도와 달리 모두 영구적인 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선택적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연구 결과가 한국과 같은 전면적 시한부 매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재현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 보고서는 국외 죽음경관을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재현하는 모호한 진술과 모순

된 논리를 이어가기도 한다.

(독일의) 묘지의 보존기간은 망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간이 지나면 이를 이장하거나 납골당에 보내지게 된다. 특별히 묘지 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이필도·고덕기, 1999, 51).

위 진술은 사실상 독일에 시한부 매장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을 보장한다는 진술은 아예 해독이 되지 않는다. 위 보고서는 시한부 매장제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1994년 같은 연구원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 결과(임종권 등, 1994)를 인용하였다. 인용한 원문에 소개된 9개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시행 예정인 것과 같은 전국적, 강제적 시한부 매장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해당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에서 실시하려는 것과 같은 방식의 시한부 매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⁵⁾ 이 보고서가 각국의 시한부 매장제도를 소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임종권 등, 1994).

끝으로 함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 죽음경관인 과거의 죽음경관과,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의 국외 죽음경관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지식-권력-계몽’의 삼각 메커니즘을 뚜렷하게 나타내 준다.

표 3.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국외 시한부 매장제도 소개 방식과 문제점(임종권 등, 1994)

국가	시한부 매장제도 소개 방식과 문제점
일본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 검토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시행이라 표기되었어야 마땅함.
영국	시한부 매장제도를 실시한다고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준영구 매장 제도가 있는 점도 동시에 소개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던 제도의 도입 근거로서 불충분함.
중국, 대만	시한부 매장제도가 있다고만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최장 안치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하던 제도의 도입 근거로서 불충분함.
홍콩	6년이 지나면 납골하는 공설묘지 규정만 소개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시한부 매장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타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국내에 소개하려는 목적이 강함. 그러나 국외 시한부 매장제도의 단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한계 등은 전혀 소개하지 않음.

특정한 목적에 맞게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권력적 효과를 발휘하는 이 메커니즘은, 이미 설정된 의도에 따라 지식이 생산되고, 모순이 은폐되며, 인식이 자연화 되는 국가의 제도적 개입 과정 전반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2) '넘비' 담론

‘담론으로서의 넘비(NYMBY)’를 지칭하는 넘비담론은, 장사 시설 중 특히 화장, 납골, 산골시설에 대한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혐오 시설 설치 반대 운동을 지역이기주의로 재현하는 담론이다. 이 담론에서는 죽음경관에 대한 근대적 배제의식을 이기주의로 재현하며 도덕적으로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장사 시설 설치 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자체가, 장사 시설에 대한 혐오의식을 반영한 시 경계 외곽 등에 주로 선정되어 왔다는 사실들은 은폐된다. 또, 그와 같은 혐오의식이 과거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과 담론 등으로 인해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비가시화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오히려 넘비담론의 모순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지니는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주기도 한다. 사실상 장사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측과, 그 반대를 비판하는 측이 펼치는 전략과 담론들이 동일한 양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담론의 특성은 2000년 무렵 한국의 화장 장려 운동과 화장장 설치에 따른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시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내 신문지상에서 죽음경관과 넘비라는 단어가 1:1의 대응관계를 맺고 언론에 집중보도된 것은 1990년대 말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 사건부터였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초구 개나리골 일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하면서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 간의 갈등 속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서초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혐오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도심 내부 등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정책적 과정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실

제 2000년대 서울시에서 화장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한 원지동 개나리골은 인가 등이 드문 개발제한구역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자체들이 선정한 대부분의 장사 시설 부지 역시 시 경계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소외 지역들이었다.

이는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를 꺼려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넘비 현상이, 오히려 혐오시설 설치를 꺼려하는 소수의 지역민들을 도덕적으로 폄하함으로써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담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곧, 한국 사회에서 넘비 현상이 최초로 발생하고 심화되었다던 199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넘비라는 단어가 최초로 필요해지고 동원되었던 시기로 재정의 될 수 있는 것이다.⁶⁾

죽음경관의 입지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넘비담론은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넘비담론이 비판했던 장사 시설 설치 반대 측 주장이, 정부가 죽음경관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펼친 기존의 논리들과 같다는 것이다. <그림 5>에 나타난 부천시 사례의 경우, 구로구 일대의 주민들은 법령이 규제하던 장사 시설 설치 금지 규정(인가 등으로부터의 거리)을 근거로 죽음경관의 설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죽음경관의 포섭을 목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넘비담론은 그간 법령이 추구하던 정책 방향까지도 비판하였던 것이다. 2007년 정부 산하 연구원이 간행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는 2000년 개정 이전의 장사 법령이 매장·화장의 기준이나 장사 시설의 설치 금



그림 5.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던 부천시 외곽 화장장 건립 부지(김순우, 2009, 33)

지지역을 명문화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중시켜왔다고 명시하고 있다(김수봉 등, 2007, 19). 이는 국가에 의해서 펼쳐지던 죽음경관 배제 논리가 지금껏 한국 사회에 의도했던 정책 결과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정책 목표 변화가 변화하면서 그 논리를 다시금 정 반대로 뒤집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죽음경관을 둘러싼 국가의 배제, 포섭 담론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라는 동일한 주체가 서초구 및 부천시와의 갈등 과정에서 보인 상이한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천시와의 갈등 과정에서 서울시는 사실상 구로구의 입장에서 부천시 장사 시설 설치를 반대해왔다. 이는 과거 서울시 내에서 서초구 원지동 일대의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 및 혐오의식으로 비판하던 서울시의 실천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역시, 죽음경관을 둘러싼 국가의 태도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가변적인, 일시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셋째, 서초구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님비담론의 발현 과정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정 전반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2002년 서초구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 계획을 입지 선정 및 규모 책정 등의 이유에서 반박한다. 요지는, 화장장의 수요자를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일대로 확대할 경우 입지 최적지가 변동한다는 것이었다. 규모 역시 1990년대 일시적으로 급상승한 화장물을 반영하여 과다하다는 내용이었다(이상운 등, 2002).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울시 및 장개협의 활동 뿐 아니라 서초구의 대응과 전략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해당 보고서가 학술적 연구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구축하여, 본인들의 정책적 목표를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곧, 당시 서울시와 서초구 모두 연구기관의 지식-권력을 빌려 장사 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실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⁷⁾

이는 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죽음경관에 개

입해 온 국가의 기존 방식들이, 정책적 목적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는 임의적 과정에 불과함을 정면으로 가리켜 준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죽음경관을 둘러싼 국가의 개입에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식과 여론을 생산해 온 학술,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준다.⁸⁾

5. 결론

국내 지리학에서는 그간 죽음 또는 죽음경관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고, 그 이면의 배경과 맥락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려는 시도가 축적되지 못해왔다. 이에 반해 국외 지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이 반세기 이상 누적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크게 1990년대 이전 연구인 죽음의 지리와 이후의 연구인 죽음경관 연구로 나뉜다.

1990년대 이전의 연구는 묘지 등의 물질적 경관 변화에 주목하며, 경관 변화와 사회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무렵의 죽음경관 연구는 보다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대상으로, 죽음경관 이면에 존재하는 관념과 실천, 담론의 층위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시도들을 이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전통 문화지리학에서 신문화 지리의 경향으로 변화하는 일정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들이 가리키는 경관 이면의 담론의 층위에 대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배제 및 포섭 담론들이 한국 사회의 죽음경관 변화 과정에 동원되어 왔음을 밝힐 수 있었다.

먼저, 배제 담론으로는,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 과정에서는 기존의 죽음경관인 묘지를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촉발하기 위한 여의도담론이 동원되었다. 이 담론은 대개 묘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발현되었으며,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은 정책 수립 및 발현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담론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지식의 부정확성, 확산 과정에서의 문제, 조사 이전에 설정된 개입 의지가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측면

등은 은폐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계몽의 차원으로 전환한 불법·호화·무연고묘지담론은, 여의도담론이 생산한 문제의식을 단속 및 계몽이라는 실질적 규제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처럼 묘사되었다. 묘지라는 죽음경관을 선호하는 사상들이 불법, 호화, 무연고 등의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재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바람직한 이상으로 묘사되던 계몽 모델의 이면이 비가시화되거나, 불법, 호화, 무연고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사실들이 은폐되었다.

이러 포섭 담론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려는 통일신라담론 및 선진국담론이 동원되었다. 선진국담론의 경우 국가의 죽음경관 개입이 시작된 1960년대 말부터 이어져 온 담론이며, 통일신라담론은 화장 장려 운동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 담론들은 일부의 역사나 특정 국가의 일부 문화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은 대개 주의 깊게 관찰되지 못해 왔다.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등장한 남비담론은 실제 화장, 납골, 산골 경관의 입지 선정 및 설치 과정에 동원되었다. 이 담론은 특정 시민을 이기주의로 재현하는 과정이 곧 이기주의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이 담론은 동원된 지식, 동원된 시민이라는 국가의 죽음경관 개입 과정 전반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근대 국가는 전통적 죽음경관인 묘지를 문제시하고 그 면적 또는 형태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담론들을 생산해 왔다. 이 담론들은 묘지를 억제하려는 배제 담론과 이를 납골, 산골시설 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포섭 담론을 포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대개 담론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과 문제점들이 비가시화(非可視化)되었고, 국가의 개입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들만이 진실로서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시행중인 시한부 매장제도, 2000년대 화장 장려 운동 이후 급증한 화장장 등을 토대로 볼 때, 이와 같은 국가의 담론은 사체가 점유하는 공간을 축소시키는 데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주

- 1) 그 밖의 연구로서, Zelinsky(1976)는 미국 내 묘지의 이름을 분류하여 이름 속에 담긴 천국 경관의 이미지를 포착해냈다. 그는 미국인에게 천국이 물과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라는 결론을 내렸고, 계속되는 봄, 상록수, 초현실, 단색의 느낌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하였다(Knight, 1985). 또한, Zelinsky(1990)는 1968년 이후 구축된 미국 지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국 내 묘지 이름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약 10만개의 묘지명 중에서 가족, 지역 명칭, 성인들의 이름, 성서적인 표현, 국가주의적인 표현 등을 분류하여, 이러한 유형을 지도화하였다. 이어 1994년의 연구에서는 이름 있는 묘지와 이름 없는 묘지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부재(absence) 하는 것에 대한 지도그리기를 시도하였다(Zelinsky, 1994). 이 연구는 지도에 나타난 묘지들의 무덤 밀도와 토지 가격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내의 근대적인 특성들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Zelinsky(1976, 1990, 1994)의 연구는 죽음경관의 분포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죽음경관의 입지에 관한 연구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문화, 제도에 접근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상술한 죽음의 지리 연구들과 구분되는 측면도 있다.
- 2) 이러한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제도-권력-지식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제도민족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이러한 사례로서 박경환, 2006; 2012a; 2012b 참조할 것).
- 3) 몇 가지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면, 1970년대 말 정부가 대학 연구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국단위 묘지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 결과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조사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다(김갑덕, 1980). 이 1970년대 말의 실태조사는 2014년 현재까지도 한국 최초의 전국 묘지 실태 조사로서 널리 활용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다시 전국단위 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범 조사를 펼쳤는데, 이 시범조사에 참여했던 인물은 시범조사의 필요성을 1970년대 말 실태조사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다(전석, 2011).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간행해 온 수많은 정책 보고서들은, 묘지 실태 조사가 불완전하며 이 때문에 묘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일관된 주장들을 이어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많은 정책 연구보고서들이 기존 묘지실태조사의 불완전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기존 묘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묘지에 대한 역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4) 실제 2000년 무렵 한국의 화장 장려운동을 이끌었던 (사)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이하 장개혁) 역시 1990년대 말 촉발된 한국의 화장 활성화에 고

(古) ○○그룹 회장의 실천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박복순 등, 2008). 당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몽 운동은 한국의 매장 문화를 화장 문화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계몽 운동을 즈음하여 발표되는 정부의 화장률 증가 통계는 장개협과 고(古) ○○그룹 회장에 대한 재현이 미친 영향력을 나타내준다.

- 5) 프랑스 시한부 매장제도는 영구분묘제도가 운영되므로(홍석기, 1997), 한국에서 실시 예정이던 시한부 매장제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명시하지도 않아왔다.
- 6) 부연하자면, 1990년대 말 서울시는 서울시 관내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SK건설, 장개협과 서울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를 구성하였다. 이후 추진협에서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 일대를 부지로 선정하자, 서초구 및 원지동 일대의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서울시, 장개협 등에서는 이를 혐오시설 기피현상,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등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비판은 서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는 해방 후부터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시 경계 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한 적이 없었으며, 과주시 일대 용미리, 벽제리 묘지를 비롯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등의 시 경계 밖에 장사시설을 편법적으로 꾸준히 유치시켜 왔다(오마이뉴스, 2007). 또한, 인적이 드문 원지동 일대를 부지로 선정한 것 역시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5년 부천시에서 시 경계의 최 외곽인 춘의동 일대에 화장장 건립을 발표하자(그림 5 참조), 서울시는 구로구의 입장에서 부천시의 장사시설 입지를 직간접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시 경계 최 외곽에 장사시설을 유치하려는 부천시나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나 모두 장사시설에 대한 동일한 혐오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서초구 원지동 일대의 주민들을 도덕적 비난 대상으로 재현했던 서울시의 님비담론 역시, 당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동원된 수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7) 이와 같은 측면은 2012년 서울시의회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위원장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서울시의 전략을 님비담론으로, 이에 대항하는 서초구의 전략을 님비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제3의 당위성을 찾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양세훈, 2012).
- 8) 1998년 11월 12일 서울시에서 작성한 『장묘시설 확충사업 민간참여 기본계획』에는 그와 같은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문헌에는 서울시가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실제로 장개협을 통해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 과정에서 시당국이 수행해야 할 부지선정 등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그 초점이 분산되는 결과를 겪게 되었다.

문헌

- 고재희, 2009, 풍수지리 교과서 4, 문예마당, 서울.
- 권선정, 2003, 풍수의 사회적 구성에 기초한 경관 및 장소 해석,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선정, 2011, 전통 民墓마을의 경관 분포와 장소 의미: 대전광역시 이사동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23(1), 26-41.
- 김갑덕, 1980, 묘지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김국도, 1970, 묘원관리, 장경문화사, 서울.
- 김두규, 2008, 내 운을 살려주는 풍수여행, 동아일보사, 서울.
- 김부식, 1984, 한국 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관행 및 묘지 분포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봉·박중서·이필도·송현동·박형준·이승영·박서림 2007,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역), 2012,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 과주(Elias, N., 1982, *Über die Einsamkeit der Sterbenden*, Suhrkamp Verlag, Frankfurt).
- 김태호, 1990, 한국 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충북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4구와 송산리 3구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주현, 2008,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3), 11, 67-79.
- 박남영·김영석, 1970, 우리나라 장묘제도 연구, 국립보건연구원보, 7, 21-60.
- 박경환, 2006, 빈곤에서 가치 쫓아짜기?: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대한 제도민족지적 비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305-322.
- 박경환, 2012a, 초국가 시대 국가 이주 정책의 제도적 틀의 신자유주의적 선회: 한국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17-31.
- 박경환, 2012b, 초국적 이주에 있어서 제도적, 조직적 행위자들의 다중스케일적 관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4(1), 95-117.
- 박복순·박태호·류성진, 2008, 장묘문화 개혁운동

- 10년: Noblesse Oblige,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서울.
- 보건복지부, 1973-1974, 통계연보.
-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1998, 장묘시설 확충사업 민간참여 기본계획.
- 양세훈, 2012, 도시지역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결, 서울시의회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료.
- 옥한석, 2003, 안동의 풍수경관 연구: 음택 명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8(1), 70-86.
- 윤홍기, 1987, 한국적 Geomentality에 대하여, 지리학논총, 14, 185-191.
- 이상윤·박희봉·이희창·강제상·강희원·김상묵, 2002, 서울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 관련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학회.
- 이판석, 1973, 우리나라의 묘지제도의 개선과 그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필도·고덕기, 1999, 시군단위 묘지실태조사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경규(역), 2012,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엘 피, 서울(Mills, S., 2004, *Michel Foucault*, Routledge, London).
- 임인숙(역), 2000,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서울 (Shilling, C., 1993, *The Body and Social Theory*, Sage, London).
- 임종권·장동현·조홍식, 1994, 묘지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순우, 2009, 혐오시설 입지선정에서 갈등의 확산과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석, 2011,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묘지실태조사 및 분석,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철욱·공윤경·차윤정,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 변화, 문화역사지리, 22(1), 1-18.
- 천선영, 2012, 죽음을 살다: 우리 시대 죽음의 의미와 담론, 나남, 파주.
- 최영환·이혁진, 2010,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역사 교훈 관광지의 이해,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3), 101-113.
- 최창조, 1978, 음택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 지리학논총, 5, 91-99.
- 최창조·박영환, 1978, 풍수에 대한 지리학적 해석: 양기풍수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13(1), 21-39.
- 한희·설아라·정주상, 2008, 항공 사진에 나타난 고속국도 주변 묘지의 입지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개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4), 193-202.
- 홍석기, 1997, 프랑스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운영, 『화장중심의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 자료집, 21-54.
- 홍성민(역), 1993, 임상의학의 탄생, 인간사랑, 서울 (Foucault, M.,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Presses Universit de France, Paris).
- Christopher, A.J., 1995, Segregation and cemeteries in Port Elizabeth, South Africa, *The Geographical Journal*, 161(1), 2-6.
- Darden, T.J., 1972, Factors in the location of Pittsburgh cemeteries, *Virginia Geographer*, 7 (2), 3-8.
- Francaviglia, V.R., 1971, The cemetery as an evolving cultural landscap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1(3), 501-509.
- Hartig, K.V. and Dunn, M.K., 1998, Roadside memorials: interpreting new deathscapes in Newcastle, *New South Wales,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6(1), 5-20.
- Hay, I. (ed.), 2010,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Human Geography(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Howett, C., 1977, Living landscapes for the dead, *Landscape*, 21(3), 9-17.
- Kephart, M.W., 1950, Status after dea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5), 635-643.
- Kniffen, F., 1967, Necrogeography in the United States, *Geographical Review*, 57(3), 426-427.
- Knight, B.D., 1985, Commentary: perceptions of landscapes in heaven,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6(1), 127-40.
- Kong, L., 1999, Cemeteries and columbaria, memorials and mausoleums: narrative and interpretation in the study of deathscapes in geography,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7(1), 1-10.

- Mills, S., 2004, *Discourse(2nd edition)*, Routledge, London.
- Moriss, S.M., 1997, Garden 'for ever England': landscape, identity and First World War British cemeteries on the western front, *Ecumene*, 4(4), 410-434.
- Pattison, D.W., 1955, The cemeteries of Chicago: a phase of land utiliz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5(3), 245-257.
- Price, W.L., 1966, Som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a cemetery study, *Professional geographer*, 18(4), 201-207.
- Rose, G., 2007,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Researching with Visual Materials, 2nd Edition*, Sage, London.
- Speck, C., 1996, Women's war memorials and citizenship, *Australian Feminist Studies*, 11(23), 129-145.
- Stanley, F., 1974, The cemetery as cultural institution: the establishment of Mount Auburn and the "rural cemetery" movement, *American Quarterly*, 26(1), 37-59.
- Yeoh, B.S.A., 1991, The control of 'sacred' space: conflicts over the Chinese burial grounds in colonial Singapore, 1880~1930,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2(2), 282-311.
- Yeoh, B.S.A. and Tan, B.H., 1995, The politics of space: changing discourses on Chinese burial grounds in post-war Singapo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1(2), 184-201.
- Young, W.F., 1960, Graveyards and social structure, *Rural Sociology*, 25(4), 446-450.
- Zelinsky, W., 1976, Unearthly delights: cemetery names and the map of the changing American afterworld, in Lowenthal, D. and Bowden, M.J. (eds.), *Geographies of the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71-197.
- Zelinsky, W., 1990, A toponymic approach to the geography of American cemeteries, *Names*, 38(3), 209-229.
- Zelinsky, W., 1994, Gathering places for America's dead: how, many, where, and w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46(1), 29-38.
- 경향신문, 1984.9.11, 전국 묘지가 서울보다 넓다.
- 데일리안, 2012.11.5, SK그룹 '대를 잇는 조림사업' ... SK임업 창립 40주년.
- 동아일보, 1998.9.16, 횡설수설: 상류층의 호화분묘.
- 동아일보, 1998.8.31, 횡설수설:崔회장의 火葬유언.
- 매일경제, 1969.9.18, 묘지공원 점점 좁아질 영원한 안면.
- 오마이뉴스, 2007.2.22, 불법 납골당에 유골 모시는 서울시.
- 주간동아, 2005.11.22, 김두규의 실전 풍수, 故 고형곤 박사의 풍수관: 고건 아버지가 직접 묘 터 잡은 까닭은.
- 주간한국, 2007.1.5, 커버스토리: 대선 주자 빅3의 풍수지리를 보니...
- 한겨레, 2011.5.17., 좋아하는 빌딩, 무엇을 꿈으시나요.
- 교신 : 박경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kpark3@gmail.com, 전화: 062-530-2385)
- Correspondence : Kyonghwan Park, Visiti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 Diego State University, 5500 Campanile Dr., San Diego, CA 92182-4493 (kpark3@gmail.com, phone: +1-619-548-2062)
- (접수: 2014.08.25, 수정: 2014.11.06, 채택: 2014.11.15)